

민주노총은 시민과 함께 **노동자 건강권을 위한 일터의 변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 2008년 서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의자를 전국 캠페인
- 2009년 청소노동자에게 씻을 권리를 전국 캠페인, 하청 노동자 샤워·수면·세탁시설 원청 제공 법제화
- 2010년 감정노동자 보호 입법 캠페인, 감정노동자 직업병 인정 법제화

산재은폐 근절, 시민안전을 위한 싸움에 앞장서 왔습니다



산재신청 노동자 불이익 금지

산재보험법 개정 (2016년 12월)
산재신청 노동자 해고·불이익 주는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고의적 산재은폐 형사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2017년 3월 국회 통과)
고의적 산재은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사업주 산재 미보고, 허위 보고 → 1,500만원 과태료. 중대재해는 3,000만원 과태료

일하다가 얻은
부상·골병 산재보상은
노동자의 권리입니다



공단지역 **노동자 권리찾기** 함께 합니다

노동조합!
삶을 지키는 최선의 선택
상담전화 1577-2260

- 서울남부 노동자 권리찾기 02-867-2260
- 경기 반월시화 노동자 권리찾기 031-493-1616
- 인천 남동공단 노동자 권리찾기 070-4756-0119
- 대구 성서공단 노동자 권리찾기 053-421-8526
- 부산 녹산공단 노동자 권리찾기 051-941-8211
- 경남 웅상지역 노동자 권리찾기 055-386-8575
- 울산본부 노동자 권리찾기 052-265-6395



세월호참사 3주기, 기억과 다짐의 4월



촛불로 만들어낸 이재용·박근혜 구속,
대통령 얼굴 바꾼다고
헬 직장, 위험사회가 바로 끝나겠습니까?

위험의 외주화 금지!! 중대재해기업 처벌 강화!!

노동자·시민이 함께 만들어 나갑니다.
민주노총이 앞장서겠습니다.



하루에 7명, 매년 2,400명이 죽는 OECD 산재사망 1위 산재공화국
 30대 기업 산재사망 95%가 하청 노동자
 하청 산재에 원청은 무혐의 남발
 메탄올 수은중독도 비정규 노동자에게... 제2, 제3의 구의역 참사 넘쳐나

40명 산재사망 기업 벌금 2,000만원
 2015년 산업안전 사고 검찰 기소율 5%
 가슴기 살균제 참사 전 옥시대표 무죄
 대형 사고마다 언론용 사죄 퍼포먼스 하는 기업들

재벌대기업·공공부문의 무차별 외주화 폭주를 막아야

솜방망이 처벌로 반복되는 노동자·시민의 죽음 중대재해기업 처벌 강화로 막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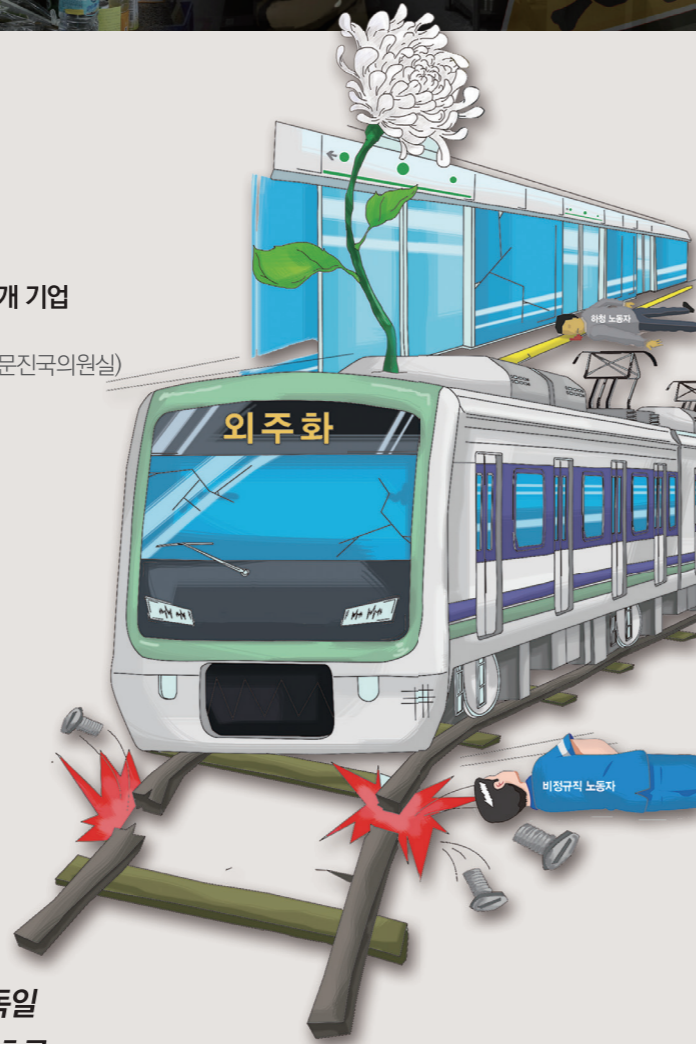


위험의 외주화 주범 재벌 대기업

위험을 외주화 해서 산재예방, 보상, 처벌에서 빠져나가는 재벌 대기업
 30대 재벌이 최근 3년간 받은 산재보험 할인만 1조 3,796억

연도	사망자 (명)		
	계	원청	하청 (비율)
2011	52	6	46 (88.4%)
2012	53	14	39 (73.5%)
2013	57	7	50 (87.7%)
2014	45	4	41 (91.0%)
2015	38	2	36 (95.0%)
계	245	33	212 (86.5%)

◀ 최근 5년 주요 30개 기업
 중대재해 사망자
 (2016년 국정감사 문진국의원실)



외주화, 비정규직 고용으로 시민안전도 흔들

지진으로 더욱 불안한 원전
 방사선 관리, 정비, 용수처리 모두 하청이지만 지진 발생 문자 통보도 제외
 하청산재가 원청의 39배인 한국 전력의 안전장구 비용 원청 73만원, 하청1만7천원
 구의역 참사에도 전국의 철도·지하철 외주화는 진행형

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면 도급을 제한하는 중국
 건설업도 원청 직접 고용비율을 강제하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위험의 외주화 금지, 하청산재에 대한 원청 책임강화는 시대적 흐름

새털 같이 가벼운 처벌에 노동자·시민만 죽어납니다

메르스 확산의 주범 삼성은 800만원,
 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이사장 발령에
 삼성 이재용 경영권 승계 앞장서고
 10여년 동안 120명이 사망한 현대건설
 몇 년마다 한번씩 10여 명이 죽는 현대중공업...



영국, 호주, 캐나다에 십 수년 전에 제정된 <기업 살인법>
 미국은 현대차 하청 노동자 1명 사망에 30억 벌금 부과
 OECD 산재사망 1위, 반복적 재난참사

노동자와 시민, 모두를 위협하는 위험의 외주화를 멈춰야 합니다!

한국에도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제정되어야 합니다!